

북한인권법 무시 5년, 유엔결의 위반 5년!

- 북한인권법 사문화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다!

일시 : 2021. 11. 16(화) 11:30

장소 : 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 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며 종전선언에 목메어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5년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여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하고,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는 제5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마저 중단했다.
4. 그러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일 뿐이다. 평화를 빙자하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2021. 11.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